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

제출년월일 : 2003. . .

제출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기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감면폭을 축소 또는 폐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자동차세 면제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추가함(안 제2조제2항)
- 나.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함(안 제6조)
- 라. 상업용 문화제도 주거용과 동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함(안 제9조제1항)
- 마.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1조)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 사. 마을공동작업에 직접사용하는 주민공동체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2

차세 면제를 삭제함(안 제13조)

- 아.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15조의2)
- 자.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15조의3)
- 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50%를 경감하며,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년간 50% 경감함(안 제22조)
- 카.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4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1. 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도 세정13400-11655(2003.6.19)】 1부
- 2.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도 세정13400-12770(2003.10.17)】 1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동조 동항중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6조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7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며,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중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주민공동체”로 하고, “변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변제한다”를 “변제한다”로 한다.

제14조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5조의3(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

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과밀
억제권역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한다.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
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
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
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
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
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조례 제367호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조례 제386호 영주시세감
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1조 및 조례 제410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
칙 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조례 제431
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및 조례 제450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중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현행 | 개정 |
|--|---|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
|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현 | 행 | 개 | 정 |
|---|--|--|--|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③..... 해당하는 경우에는 | ③..... 해당하는 경우에는 | ③..... 해당하는 경우에는 |
| 1. ~ 2.(생략) | 1. ~ 2.(현행과 같음) | 1. ~ 2.(현행과 같음) | 1. ~ 2.(현행과 같음) |
|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3. 장 | 3. 장 | 3. 장 |
|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
|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략) |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 ②제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②..... 해당하는 경우에는 | ②..... 해당하는 경우에는 | ②..... 해당하는 경우에는 |
|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현 | 행 | 개 | 정 |
|--------------------------|---|---------------------------|---|
|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 | | | |
| 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 | | | |
| 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 | | | |
| 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 | | |
|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 | | |
|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1. ~ 4.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 |
|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 |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 | |
| 박물관 및 미술관 | | 에 의하여 등록된 | |
| 6. ~ 7. (생략) | | 6. ~ 7. (현행과 같음) | |
|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생략) | |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 |
|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 | | 1. | |
| 조와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 | | | |
| 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 | 부동산 | |
|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 | | 2. 건축물 | |
| 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 | | |
|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 | | | |
| 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 | | |
| 부동산 | | 부동산 | |
| 3. (생략) | | 3. (현행과 같음) | |
| ②(생략) | | ②(현행과 같음) | |
|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 | |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
|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 | | |
|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 | | | |
| 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 | | | |

| 현 | 행 | 개 | 정 |
|------------------------|------------------------|---|-------------------------|
| 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 | | | |
|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 | | | |
| 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 | | | 주택법 제9 |
| 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 | | 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 |
|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 | | | |
| 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 | | | |
| 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 | | | |
| 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 | | |
|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 | | |
| 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중 | | | |
| 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 | | | |
| 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 | | | |
| 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 | | |
|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 | | | |
| 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 | | |
| 와 종합토지세를 추정한다. | | | |
|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 | 1. | | 임대주택법시 |
|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 | | 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 |
|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 | | 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
|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 | | | |
| 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 | | | |
| 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 | | | |
| 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 | | | |
| 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 | | | |
| 제한다. | .. | | |
| 2. ~ 3. (생략) | 2. ~ 3. (현행과 같음) | | |
|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 |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 | | |
| 면) ①~②(생략) | 면) ①~②(현행과 같음) | | |

| 현 | 행 | 개 | 정 |
|---|--|--|-------|
|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
|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주민공동체..... 면제한다 | |
|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면제한다 | |

| 현 | 행 | 개 | 정 |
|--|---|---|--|
| 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u>5년간</u>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 | |3년간 |
| <신설> | | | 제15조의2(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합)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현 | 행 | 개 | 정 |
|------|---|---|---|
| <신설> | | | <p>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정한다.</p> <p>제15조의3(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 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 |
| | | | |

| 현 | 행 | 개 | 정 |
|--|--|---|--|
| | | 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 |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
| | |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 |
|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 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날 | |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 |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 |

| 현 | 행 | 개 | 정 |
|--|-------------------------|--|--|
| | | | 의 50을 경감한다. |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 | | |
| | | | |
| |2006년 12월 31일..... | | |
| | | | |

| 현행 | 개정 |
|---|--|
| <p>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 ~ 5. (생략)</p> <p>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p> <p>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 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p>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p> | <p>.....</p> <p>.....</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p> <p>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p>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p> |

| 현 | 행 | 개 | 정 |
|---|---|---|---|
|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의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 | ②.....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 |
| 제26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 | 제26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18

관인생략

경상북도

정보통신망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전화 (053)950-2311 /전송 (053)950-2319

처리과 세정회계과 과장 박현규 사무관 배병욱 담당자 전강원

문서번호 세정13400-11655
시행일자 2003.06.19 (5년)
공개여부 공개

수신 시장군수
참조

| | | | |
|--------|-----|-------------|-----------------------|
| 선 량 | 과장 | · · · | 지 시 |
| 접 수 | 일자 | 2003.06.19 | 결 재 · 공 관 |
| | 시간 | 오후 04:05 | |
| | 번호 | 21498 | |
| | 처리과 | 세무과 | 전 결 |
| | 담당자 | | |
| | 심사자 | | 심사일 |

제목 시·군세 감면조례개정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60(2003. 6. 18)호와 관련입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국가보훈처의 건의를 행정자치부에서 2003. 6. 18 불임(안)과 같이 수용(허가)키로 하였음을 통보하니, 2003. 12. 31까지 지방의회 의결 등 제반절차를 거쳐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한 후 시행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시·군세 감면조례개정표준(안)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도 ○○시 ·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시 · 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세감면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의1(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의1(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제2조의1(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의1(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 1.~4. (생략) | 1.~4.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관인생략

경상북도

정보통신망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전화 (053)950-2311 /전송 (053)950-2319
 처리과 세정회계과 과장 박현규 사무관 배병욱 담당자 전강원

문서번호 세정 13400-12770
 시행일자 2003.10.17 (5년)
 공개여부 공개

수신 시장군수
 참조

| 선 람 | 과 장 | 지 시 | | |
|--------|----------|------------------------|----|-----|
| 접 수 | 일자 시간 | 2003.10.17 오후 04:15 | 담당 | 박현규 |
| | 번호 | 22861 | 담당 | 배병욱 |
| 처리과 | | 세무과 | 담당 | 전강원 |
| 담당자 | | | 담당 | 전강원 |
| 심사자 | | 심사일 | | |

제목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1923(2003. 10. 16)호와 관련입니
 다.

2.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시달하니
 해당 시군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금년말까지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개정표준안외의
 감면사항은 감면기한을 2006. 12. 31까지 연장)함으로써 2004. 1. 1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시군에서는 조례개정일정과 개정현황을 작성하여
 2003. 12.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조례개정일정(예정)

| 시군별 | 입법예고기간 | 의회의결일자 | 공표일자 | 비 고 |
|-----|--------|--------|------|-----|
| | | | | |

붙 임 :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1부. 끝.

23

경 상 북 도 지 사

地方稅減免條例改正標準(案) 細部改正事由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조정하여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마련하였음

□ 감면조례 개정개요

-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 시·도 감면조례담당자 토론회와 자치단체·관계중앙기관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총18건의 개정안을 마련함

□ 감면조정 기본방향

- 장애인·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
-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폐지하고, 국가정책목적을 위한 신규 감면은 최대한 억제
-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
-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

<감면조례 현황>

- 감면규모 : 총87종, 7,572억원(2001년도)
※2001년도 징수총액의 2.8%, 감면총액의 41.3%

□ 그동안 推進 經緯

- 2003.1.13 ~ 2003.6.30 : 시도 감면조례개정의견 수렴
- 2003.7.14 ~ 2003.7.16 : 시도담당자 토론회 개최
- 2003.7.25 ~ 2003.8.20. : 토론결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 2003.8.25 ~ 2003.9.10. : 관계부처의견 시도재의견수렴
- 2003.9.11 ~ 2003.10.5. : 표준안작성

□ 改正 內容

1.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 현 행 | 개 정 안 |
|---|--------|
|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 지역내에서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 취득세 · 등록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면제 | 50% 경감 |

<개정사유>

-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 50%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
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지역도 50% 경감으로 조정함

<보건복지부> 수응(합의완료)

2.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²⁶

| 현행 | 개정안 |
|---|---|
| ○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 취득세·등록세 면제 | ○ 노인복지시설중 <u>유료노인복지시설</u> 에 대하여 - 50% 경감 |

<개정사유>

- 노인복지시설중 고가로 분양·운영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전환함이 타당하나,
※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감면을 연장키로 함
- 노인복지시설의 기반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50% 경감으로 조정함

<보건복지부> 수용(합의완료)

3.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정

| 현행 | 개정안 |
|--|------------------|
| ○ 60~85㎡: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 삭제 > |
| ○ 60㎡이하: 취득세·등록세 면제 | < 현행 유지 > |
| ○ 40㎡이하 <u>영구임대주택</u> :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 | <u>국민임대주택</u> 추가 |

<개정사유>

- 60㎡~85㎡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IMF 이후 주택경기촉진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고,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기로 함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구 분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
| 근 거 법 령 | 임대주택법 §2①, §12① 시행령 §9①제1호 | 임대주택법 §2①, §12① 시행령 §9①제2호 |
| 건 설 자 금 | 국가·자치단체·국민주택기금 | 국가·자치단체·국민주택기금 |
| 임대 의무기간 | 50년 | 30년 |

<건설교통부> 수용(합의완료)

4.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축소

| 현 행 | 개 정 안 |
|--|--------|
| ○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 용건축물에 대하여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 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 설세 면제 | 50% 경감 |

<개정사유>

- 주차장이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전환함이 타당하나, 전액과세전환시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50% 경감으로 조정함

※ 16개 시·도 모두 감면축소 건의

<건설교통부> 이견 없음

5.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

| 현행 | 개정안 |
|---|--------|
| ○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발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 사업소세 면제 | 50% 경감 |

<개정사유>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상 과세전환이 타당하나
- 농업기반공사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50%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함

<농림부> 수용(합의완료)

6.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

| 현행 | 개정안 |
|---|------------------|
|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 재산세 <u>5년간</u> 3/1000세율 적용 | <u>3년간</u> 으로 단축 |

<개정사유>

- IMF이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 5년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없는 실정이므로 세제 지원기간을 단축조정함

<건설교통부> 수용(합의완료)

7. 자산관리공사 및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감면 축소

| 현행 | 개정안 |
|---|-------------------------------|
|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와 등록세 <u>면제</u> | <u><삭제></u> 조특법 이관(50%) |

<개정 사유>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IMF 이후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부여한 사안으로 이제는 기업구조조정이 어느정도 완료된 상태라고 보여지므로 과세전환이 타당하나
- 아직 우리경제에 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액과세전환시 관련회사에 미치는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하여 50%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하고,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가경제정책사항으로 감면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유사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특법으로 이관하기로 함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수용(합의완료)

8.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

| 현행 | 개정안 |
|---|--------|
|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 자동차세 면제 | < 삭제 > |

<개정사유>

-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

<건설교통부> 이견 없음

9.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

| 현행 | 개정안 |
|---|--|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내 공<현행 유지> 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 최초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 세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 ○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 최초 3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개정사유>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계부처대책회의에서 국세와 함께 지원하기로 한 사항으로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함
- ※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감면기간에 차등을 둠

<경기도>

10. 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감면

| 현행 | 개정안 |
|---|-----------|
| ○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 |
| -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전액 면제 |
| -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 < 현행 유지 > |

<개정사유>

-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사업은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주요 SOC 사업이나,
-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수익률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자치단체의 감면허가 신청을 수용키로 함

※ 중부권의 경우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화물터미널 사업이 2008년에 종료될 예정이고, 영남권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5년간 50%경감 수준에서 시한을 연장키로 함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개요>

| 구분 | 중부권 | 영남권 |
|------|-------------|--------------|
| 지역 | 충남 연기·충북 청원 | 경북 칠곡 |
| 기간 | 2004~2008년 | 2002~2008년까지 |
| 사업비 | 3,529억원 | 2,512억원 |
| 감면세액 | 37억원 | 55억원 |

※ 전국5대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중 수도권, 부산권 및 호남권은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음

<충청남도, 충청북도, 연기군, 청원군, 경상북도, 칠곡군> 허가사항임

11. 지방공사 소유 전동차에 대한 감면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 지방공사가 소유하는 전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

○ 전동차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고유업무용 재산이므로 부동산과 같이 면제 대상에 포함시킴

<건설교통부> 이견 없음

12.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현행 | 개정안 |
|--|------------------------|
| 문화재 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u>주거용 부동산</u> 에 대하여 | 주거용외 <u>상업용 부동산</u> 추가 |
| - 재산세 ·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면제 | |

<개정사유>

-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

<문화관광부> 이견 없음

13. 임차인이 경락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 현행 | 개정안 |
|---|--|
| ○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임대주택을 최초 분양받는 경우 - 취득세·등록세 감면 | ○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경락취득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 |

<개정 사유>

- 임대의무기간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당해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경락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므로 감면대상에 포함

<건설교통부> 이견 없음

14. 사업종료에 따른 감면규정 폐지 : 총5건

-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서울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업용 부동산
- 강원속초항 임시국제여객터미널용 부동산
- 제주 주거환경개선사업용 부동산

☐ 향후 추진 계획

-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통보 : '03. 10.
- 자치단체별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공포 : '03. 12. 31.까지

00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00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6조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한다.

제7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중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를 “주민공동체가”로 하고,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4조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15조의1중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를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하고, 동조단서중 “면제된”을 “경감된”으로 한다.

제15조의2중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

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하며,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한다.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00조(강원도00시·군과 경상북도 문경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00조(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중 제목을 ‘제00조(중부권 및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00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u>자동차폐차영업소</u> 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③ -----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3. ----- <u>자동차폐차영업소</u> ----- -----. |
|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u>자동차폐차영업소</u> 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② -----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3. ----- <u>자동차폐차영업소</u> ----- -----. |

| | |
|---|--|
|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 |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 --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
|---|--|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7. (생략)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4. (생략)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7. (생략)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시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00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1. -----
----- 부동산

2. ----- 건축물

----- 부동산

3. -----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파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연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43

-----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

1.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

2.

3.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3년간 -----
-----.

제15조의1(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 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된

제15조의2(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3. (생략).

제15조의1(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

경감된

제15조의2(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1~3. (생략).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 15년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을 조정 가능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은 15년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2항은 10년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을 조정 가능

※ 제1호 및 제2호의 후단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여부와 일치시켜 개정하고, 해당 없는 단체는 후단을 생략하여 개정(국회 제경위 계류법률중 정부제출법안 참조)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 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안에서 자율결정함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

※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안에서 자율결정.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

-----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00조(강원도00시·군과 경상북도
문경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광지
역 진흥지구안에서 공장(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
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
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7
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
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
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당해 공장관리기관 또는 당해 공
장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
하여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00조(강원도00시·군과 경상북도
문경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

----- 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00조(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
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지구 내에
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
동산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
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00조(중부권 및 영남권 복합화물터
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

